

< 정답 및 해설 > - 김 중 규 -

[문1] ② 신중앙집권화란 1929년 경제대공황직후 행정 국가 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완전한 지방분권화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중앙집권을 의미한다. 이는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방화와 세계화에 따라 신축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화가 요구된다. 1990년대 행정은 국제화(Globalisation)와 지방화를 강조한다.

[문2] ⑤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으로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특히 관료조직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고 본다. 한편 정부가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는 사회에 대한 규제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문3] ①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크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데 Cook & Campbell은 타당성의 기준으로 구성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결론의 타당성, 외적 타당성을 들고 있다. 기준타당도는 근무성적 평정의 타당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정책평가의 타당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⑤의 통계적 타당도는 결론의 타당도라고도 한다. Cook & Campbell이 제시한 개념이 아니다. Cook & Campbell이 제시한 타당도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p.360)

1) 구성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 :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2) 통계적결론의 타당성(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 : 정책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정책평가가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설계되어진 정도

3)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 나타난 효과가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4)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 발견된 효과들이 다른 이론적 구성요소들에게까지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문4] 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정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수입이다. 정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다.

[문5] ② 형평성이란 미국에서 60년대 신행정학의 개념으로 Frederickson이 제시하였다. 형평성에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있는데 수직적 형평성이란 능력과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잘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배분하고, 못사는 사람에게는 많이 배분하는 불평등의 개입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평적 형평성이란 수익자부담주의처럼 같은 조건에 있으면, 같게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문6] ③ 영기준예산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란 예산결정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이는 계나 과와 같은 조직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독립된 의미있는 개개의 사업 또는 활동단위를 말한다. 그 다음 의사결정단위 별로 목표와 대안을 모색한 뒤, 수준을 달리하는 효과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 단위의 우선순위가 조직 전체에 서 종합된 것이 의사결정 package 이다.

[문7] 정답없음. 이 문제는 행정학 문제라기보다는 경영학에 가까운 문제로서 시도는 좋으나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문제이다. '직장생활의 질'(QWL ; Quality of Work Life)이란 1960년대 미시건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주도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작업풍토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직장생활의 질'이나 '근로생활의 보람'을 확립하려는 것인데, 직무충실화를 비롯하여 직무설계와 사회기술적 재설계의 원리를 적용하여 작업상황의 질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을 말한다. 이는 한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근로운동으로서, QWL은 i)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 ii)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iii) 개인적 성장과 발전(승진과 경력발전), iv)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일체감과 공동체의식), v) 사적인 권리 보장(사생활 보호에 의한 사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 vi) 업무와 비업무활동의 양립, vii)작업생활의 사회적 유관성(각자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인식)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직무설계(Job Design)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율적인 통제와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등 '참여에 의한 관리'나 '높은 성과체제'가 강조되면서 QWL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는 i)노조의 지원과 개입, ii)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 iii)직업적 안정성의 보장, iv)집단중심의 문제해결훈련, v)직무재설계의 주도, vi)기술훈련, vii)계획과 예측의 근로자 참여, viii)관리자와 근로자의 정기적 모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는 일견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목표관리(MBO)는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으로서 '참여에 의한 관리'(high involvement management)를 중시하는 QWL의 기본철학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직무의 재설계 또한 QWL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정답으로 지목한다면 ①이 정답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 하겠다. ①의 목표관리는 근본적으로 직원의 근로생활의 질 향상보다는 조직의 효과성 제고라는 고전적 조직이론의 속성을 내

포하고 있고, MBO는 내부적인 단기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근 QWL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구성원도 작업생활의 사회적 유관성(각자의 작업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는 인식)을 중시한다는 점, 그리고 각종 자료나 논문을 확인해 볼 때 목표관리(MBO)를 QWL의 요소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문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정답①에 대한 저의 입장>

QWL과 MBO는 우선 그 목표와 철학에 있어 상이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QWL은 '근로생활'이라는 종업원 입장에서 대두된 것인데 반하여, MBO는 조직의 '효과성' 향상이라는 관리자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참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전자는 참여가 목표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근로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전략에 있어서는 서로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기본목표나 철학에 있어서는 상이함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QWL의 '구체적인 전략'이 아닌 '기본목표와 철학'을 묻는 것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①에 대한 행자부의 답변. 2000.9.14>

목표관리가 참여에 의한 관리방식이라는 지적은 옳다고 할 수 있으나 목표관리는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조직목표의 현실적인 확정, 보다 현실적인 목표수준의 설정을 통한 조직목표의 달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구성원의 직장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목표관리는 본질적으로 직장생활의 질보다는 합리적인 조직관리 철학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직장생활의 질이 각종 사회지표들의 추출과 체계화로 결집되는 데 대하여, 목표관리는 생산성 중심의 개념으로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참여과정을 통하여 조직목표를 명확히 체계화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결과를 평가·환류시키는 관리체계가 바로 목표관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표관리는 조직관리자를 위하여, 그리고 관리자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목표가 설정되는 관리계획 및 평가의 한 집근방법이므로 '직장생활의 질'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문8] ③ 고전적 행정학에서 보는 집행과 현대 행정에서 보는 집행론은 시각이 다르다. 고전적 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그 주체와 시점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하여 기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행을 강조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상향적 집행으로서 집행의 과

정에서 결정의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문9] ②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전문성, 신축성이 요구된다. 이에 개방형에 입각하여 행정이 시민에 공급하는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행정 내부 관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문10] ⑤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는 투입보다는 산출을,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다. 3번 문항에서 통제, 관리, 계획의 세가지 기능은 어떠한 예산제도에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의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PPBS의 경우 이러한 기능을 내포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계획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품목별 예산이 계획을 내포한다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긴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객관식의 특성상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물음은 최근 공공관리론에 바탕한 예산추세를 묻고 있으므로 결과중심의 예산을 확립하기 위하여 총괄배정 등 각 부처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권의 수평적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 [문11] ⑤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시간상오류(Recency Error)란 일종의 근접오류로서 평정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이는 주로 평정자가 소수의 피평정자들을 근거리에서 평정하는 관계로 주로 최근의 실적을 기억하거나 피평정자가 그가 평정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평정자의 눈치를 살피는 현상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문12] ④ ① 부패행위고발자제도는 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고, ② 대만에서는 고발자보호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여 고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③ 미국의 양심선언자 보호법은 인사상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패행위고발자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 [문13] ③ '인사행정'이 전통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즉 개인과 조직목표를 상충관계로 인식하는 교환모형이라면,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Y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이 있으나, 권위주의와 X이론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문14] ③ 분권화되면 중앙의 지침이나 법규에 따르지 않게 되어 집행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집권화될 때 비교적 정책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집행된다. 한편 표준운영절차(SOP)는 경직성으로 인해 집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문15] ④ ④는 반대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등의 구입하려는 물품을 증시하기 때문에 회계학적 개념이 적용된다. 그러나 계획예산제도는 체계적인 대안의 모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계량적기법(체계분석 등)이 증시된다.

[문16] ④ 순응(compliance)에 따른 비용은 정책에 복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납세에 따른 부담, 즉 순응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 탈세라고 본다.

[문17] ① 집단간의 갈등을 우리나라의 지역이거주의나 지역감정 등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응집력이란 얼마나 뭉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집단간 협조보다 갈등이 클수록 집단 내 구성원들끼리 더욱 뭉칠 것이고 충성심이 높아지고 응집력이 강화될 것이다. Perrow에 의하면 '기술분류와 조직구조의 관계'에서 기술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기술을 중개형기술(집합적 상호의존성), 연속형기술(연속적 상호의존성), 집약형기술(교호적 상호의존성)로 구분하였다.

1) 집합적(pooled) 상호의존성이란 부서들 간의 관련성이 없어 상호의존성이 가장 낮은 경우이다. 중개형기술이나 일상적(routine) 기술을 사용한 다.

2) 연속적(sequential) 상호의존성이란 어느 부서의 활동이 다른 부서의 활동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호의존성을 말한다. 앞선 부서의 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다음 부서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정도로 상호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연계된(linked) 기술과 관련된다.

3) 교호적(reciprocal) 상호의존성이란 상호의존성이 가장 높은 경우로서 집약형(intensive)기술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공할 때 이를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빈번한 상호작용과 협력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형화된 규칙이나 표준화의 효용이 저하되며 부정기적 회의나 상호조정, 수평적 의사전달 및 활발한 조정이 요구된다.

고로 상호의존성이 낮은 집합적(pool)인 경우에서 연속적(sequential)인 경우 → 교호적인 경우로 나아갈수록 집단간 갈등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조정도 어렵다. ②의 경우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갈등관리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적절한 갈등은 조직의 활력을 제고한다.

[문18] ⑤ ③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이다. ② 종합적 합리성은 합리모형이다. ④ 조합리성은 최적모형이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선택기회의 흐름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쓰레기통모형이다.

[문19] ⑤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공익이나 정의, 형평 등의 본질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합법성에 너무 치중하면 목표의 전환이나 대치현상이 발생한다.

[문20] ③ 비정부단체(NGO)는 공공재이론에 의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그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 계약실패란 시장실패로 이해될 수 있고 무임승차의 문제는 공공재 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21] ④ 문17의 해설을 잘 살펴보자. Thompson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비용이 비싼 것은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집약형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집약형기술이란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때문이다. 기술의 유형론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J.Woodward의 유형론 (작업과정에 따른 분류)
- 단일산품 또는 소수단위산품 생산체제 : 개별주문에 따라 한두개 생산(선박, 항공기 등)
- 다수단위생산 또는 대량생산체제 : 같은 종류의 산품을 대량으로 생산(치솔, 라디오 등)
- 연속적인 생산체제 : 연속공정생산체제(화학제품 등)

(2) J.D.Thompson의 유형론
- 길게 연계된 기술(long-linked technology) : 순차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계된 경우로서 표준화된 상품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할 때 유용
- 중개기술(mediating) : 의존관계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기술로서 역시 표준화를 추구(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 집약형기술(intensive) :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기술이 개별적인 고객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배합(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

(3) C.Perrow의 유형론(원자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 일상적기술(routine) : 분석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 기능(craft)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고급유리그릇 생산)
- 공학적기술(engineering) :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 비일상적기술(routine) :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원자력추진장치 등)

[문22] ④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즉 민주성의 강화에 중점을 둔다. ③ 개방형 보다는 폐쇄형에서 계속성이 유지된다. ② 대표관료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능률성과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문23] ② 읍부즈만은 기존의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뿐이지, 이를 무효·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watch dog without teeth로서 간접적 통제에 그치므로 실효성이 약하다.

[문24] ② 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제도를 채택하였지

만, 제2공화국(1961년)이후로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문25] ⑤ 이 문제는 품질중심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관리예산처, OMB)가 운영하는 대통령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과 똑같은 국가차원의 행정품질상제도가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부문의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상수상제도는 있으며 공공부문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보기 ④의 경우 ‘공공부문’이라는 단서가 없고 ‘미국의 국가품질상과 유사한 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르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부문의 국가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제도의 도입여부에 초점을 둔 문제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⑤의 경우 물론 무형적 서비스가 많은 정부조직에 TQM등의 품질관리기법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일반적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서비스의 친절성, 신뢰성 및 신속성 등의 품질은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도 총체적품질관리(TQM)와 같은 품질관리기법의 적용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⑤의 보기를 ‘정부조직은 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품질에 관한 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면 모르되 단정적으로 ‘정부조직에 이를 도입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공공부문의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문26] ③ 기금은 국회의 감사는 받지만, 예산외로 운영되므로 국회의 엄격한 심의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국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받는다.

[문27] ①②(복수정답) 중앙인사위원회는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도 현재는 틀리다. 2004.6 이후 인사기능 일원화로 인하여 중앙인사위에서 채용시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28] ④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반면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문29] ① 조직의 방침이나 정책과 같은 근무환경적 요인은 불만요인으로 위생요인이다.

[문30] ③ 연구직과 지도직도 일반직이다. ① 계약직은 종전의 전문직으로 특수 경력직이다. ② 현행 분류는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규정(제3장)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계급제를 주로 하고 있다. ④ 특정직은 법관, 교사 등과 같은 것으로 9계급이 아닌 별도의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⑤ 비상근 공무원은 별정직, 계약직 이외에 고용직 등도 인정된다.

[문31] ① 실험설계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폐쇄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내적 타당성은 높으나 외적타당도는 떨어진다.

[문32] ⑤ Adams의 공평성이론은 준거인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호혜주의규범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공평한 교환을 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문33] ⑤ 강제적인 개혁인 경우에는 대상조직을 제압하고 소외시킨다. 이 경우 포획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문34] ④ 재정자립도의 계산에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문35] ③ 호손효과는 외적타당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실험대상자가 실험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문36] ①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에 입각하여 있다.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제 수립의 저해요인이며 직업공무원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는 단점때문에 최근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문37] ① ② 행동은 단순히 외면으로 표출된 행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의도된 행동으로 현상학에서 중시한다. ③자유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④⑤의 경우 원자적인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능동적·사회적인 인간이나 상호협력하는 인간이다.

[문38] ④ ②의 경우 이슈제기집단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도출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이슈의 확산을 꾀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노화준 정책학원론, p.110). 그러나 ④의 경우 이슈란 일반대중에게 당해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활동이므로 내부집단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답④에 대한 행자부 및 출제자의 입장>

사회적 이슈란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해결방법에 대하여 집단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집단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말합니다. 사회문제는 해결방법에 따라 영향받는 집단이 달라지고 문제해결방법은 문제의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내용의 정의, 채택될 해결방법에 대하여 집단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게 되고 갈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 정책결정자가 일단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사회이슈화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방식에 최고 정책결정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부어넣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되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R.Eystone같은 학자가 사회적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거쳐 공식의제화되기도 하고, 광중의제 단계를 거치기도 하며, 곧바로 사회문제가 공식의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사회적이슈는 정책의제를 위한 전단계로서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도출하는 것이 확산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확산이 대외적 활동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도출은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중요하다, 이슈확산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39] ③ 권력과 권위, 영향력을 서로 구별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M.Weber는 권력(power)을 개인적 속성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직위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받아들일도록 하는 강제적·하향적·일방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은 수용자의 인지와 반응에 상관없이 작용하는 일방성과 하향성을 지니는 능력이다. 이에 반하여 권위(authority)란 공식적 지위나 보상, 제재와 같은 통제에 입각하여 부하로부터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로써, 부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일종의 제도화된 정당한 권력이다. 권력이 필요에 따라 복종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권위가 없는 권력은 신분, 지식, 비공식적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권위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확립된 구조나 지위의 정당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영향력(influence)이란 심리적·행태적 변화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힘으로서 권력이나 권위보다는 범위가 넓은 일반적 개념이며 리더십과 관련된다. 결국 ‘영향력>권력>권위’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영향력은 권력의 상하작용방향, 공식성, 제도성여부에 관계없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권력은 공식성, 제도성, 자발성여부와는 관계없으나 하향적·일방적인 권력을 말하며, 권위는 공식성, 제도성, 자발성에 의하여 수용되어지는 권력을 말한다. 따라서 ③의 경우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표현되어야 옳다.

[문40] ④ 카리스마적 권력은 제도화된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초인적 힘에 의한 상징적 권위를 말한다.

2000년도 행정고시 1차문제 출제평

이번 2000년도 행정고시 1차 행정학문제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사법시험에 이어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행정학시험의 새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평가된다. 단편적인 이론이나 개념보다는 총론의 행정이론은 물론 각 파트별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충실한 이해없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특히 정책학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조직론 각론에서도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예컨대 비정부단체(NGO)나 내부고발자보호제, 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OECD국가들의 정부혁신방향 등 시사적인 분야에서도 상당수의 문제가 예상대로 출제되었다. 또 한가지 이번 시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흔히 행정학 객관식문제는 원래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그 본질상 출제수준을 좀 높이면 정답시비가 생겨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어렵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향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는 점이며 앞으로 행정학 객관식 시험문제가 얼마든지 가다듬어지고 그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시 행정학문제는 전체의 흐름과 문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이해한 수험생과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수험준비를 한 수험생들에게 합리적인 점수차별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행정학 객관식시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잘 일러주고 있다고 하겠다.